

‘尹 두번째 탄핵안’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 표결

민주당, 오늘 본회의서 보고기로 박찬대 “탄핵 찬성만이 사태 수습”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 속도 내란·김건희 특검법도 표결 처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이 오는 14일 오후 5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안을 오늘 발의해 12일 보고, 14일 오후 5시 표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첫 탄핵안이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자 12월 임시국회 소집과 동시에 재발의에 나섰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앞서 민주당 등 야6당 지난 4일 윤 대

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헌법이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반한 비상계엄을 위법하게 남용,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소추안에 적시했다.

특히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의사당까지 계엄군을 투입해 계엄령 해제 요구를 막으려고 한 건 내란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2차 탄핵안엔 특전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지휘관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지시한 혐의 등을 추가로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해 내란 사태를 빠르게 종결하는 것만의 수습의 유일한 길이란 걸 명심하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또다시 불발된다면 대한민국은 선진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독재 국가라는 인식이 고조될 것”이라며 “나라가 망하든 말든 권력잡기에만 혈안인 집단이 민주주의 정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는냐”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여당을 향해 “경제·외교·안보·국격 등 모든 분야에서 입게 될 중차대한 피해가 뻔한데 당리당략 잇속만 챙기려 하는 것은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똑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 구성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를 긴급히 마련할 것”이라며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2명,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1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추천위 구성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특검법과 네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12일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다.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일체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 방식으로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해 3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택했으나, 전날 법안소위에서 대통령 개입 우려가 제기된 다며 야당과 비교섭단체 추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변경했다.

특검은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공무원 80명 이내 등 200명 안팎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수사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특검 임명 후 20일 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기본적으로 90일 이내로 수사를 진행한다.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30일 연장이 가능하고, 이후에도 대통령 승인을 거쳐 추가적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네 번째로 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을 15가지로 대폭 늘렸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모두 부결, 폐기됐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與, 탄핵 표결 참여 10명 안팎... 찬성표는 5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국민의힘 의원이 10명 안팎까지 늘었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의원은 5명이다.

11일 여권에 따르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의원은 김상욱·김예지·김재섭·안철수·조경

태 의원 등이다.

표결은 참여하되, 찬반 입장은 밝히지 않은 의원은 김소희·배현진 의원 등이다.

또 박정훈·우재준·유용원·진종오 의원 등도 투표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동진 의원은 표결은 참여하겠지만 탄핵에는 반대한다며 부결표를 시사했다. 탄핵보다는 윤 대통령이 스스로 조기 퇴진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뉴시스

문재인 “윤 대통령 탄핵, 피할 수 없는 길 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불행한 일이지만 탄핵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됐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질서있는 퇴진의 방법은 국민의 뜻과 헌법 절차를 따르는 길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는 비상계엄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경악하면서도

우리 국민과 국회의 굳건한 민주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계엄내란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국격 추락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도 국회에 달려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기에 세계가 공인하는 합리적인 대통령 권한 대행은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그러지 않으면 필요할 때 정상외교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광주시의회 ‘尹 탄핵 현수막’에 여당 의원 반발

민주당 소속 의원들, 청사에 게첨 국힘 의원 “공공건물 현수막 불법”

광주시의회가 청사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자 여당 의원이 ‘공공건물에 정당 현수막은 불법’이라고 반발하는 등 여야 대립이 본격화하고 있다.

1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전날 청사 외벽에 ‘국민의 명령이다. 광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글귀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게첨했다.

이에 앞서 시의원 23명은 지난 9일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갖고 시의회 청사 외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촉구하는 현수막 게첨 여부를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이뤄진 간담회라 민주당(22명)·무소속 의원(1명)은 찬성했지만,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인 김용임 의원은 ‘정치적 이념을 담은 현수막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 간담회에서는 결국 해당 현수막을 시의회와 5개 구의회 청사에 내걸기로 최

종 결정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의원들의 점유물이 아닌 공직자와 함께 생활하는 공공시설”이라며 “공공시설에 정당의 이념을 담은 불법현수막 게첨을 중단하고 독재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게첨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광주시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옥외 광고물 관리법과 공직선거법상 위법 여부를 확인한 결과 ‘집회 후 현수막 게첨이 가능하고 의회 명의·의원 명의로 제작해 의회 벽면에 현수막을 게첨하는 것은 선거법상 저촉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탄핵 정국은 여야를 떠나 국민의 일원으로서 엄중히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항변했다.

신수정 시의장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트린 윤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을 촉구하는 시의회의 뜻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대형 현수막을 청사 외벽에 내걸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성현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 총리 “담화 직전까지도 ‘한-한 공동운영’ 몰랐다”

덕수 동훈

국회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 “계엄 국무회의 절차적 흠결” 박범계 “권한대행 대신 안 돼”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위헌 논란을 빚은 ‘한(덕수)-한(동훈) 공동 국정 대행’ 체제와 관련해 한동훈 대표와 논의조차 없었으며 공동대국민담화 당시까지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한 공동 운영 논의했다’고 묻자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지난 8일 공동대국민 담화를 했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퇴진 전까지 총리와 함께 국정을 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대통령께서 계엄을 하겠다고 말씀하시어서, 이것은 어느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국무위원들을 모아서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것이 초래할 일에 대해

대통령을 설득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이 어떻게 계획된 건 모르지만 모두가 모이면 같은 생각을 할 거라 생각했다. (계엄 심의)회의 자체는 절차적, 실제적 흠결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앞서 국민에게 네 차례 허리숙여 사과하며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며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하고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당해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이 나라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신 안 된다”고 목적을 높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단독 처리된 예산안에 대해 “가장 충실하게 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산에는 민생 안전과 대외확실성에 대한 대응도 들어가 있고, 조속히 집행하고 공기업 투자나 정책금융 이런 것도 모든 수단을 가용수단을 최대

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요청했으나 안전 및 발언 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추가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

행안부가 대통령실로부터 회신 받은 내용을 보면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17분~10시22분), 개최 장소(대통령실 대접견실) 등이 담겼다.

참석자 및 배석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11명이었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이었으며, 제안 이유는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라고 적혔다.

다만 발언 요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대통령실은 회신 내용을 통해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